

누구를 위한 공익인가?

교육의향

하정호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과장



의대정원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둘 다 공익을 위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시민들이 피해를 겪는다. 비단 의료계만의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분쟁이 공익을 명분으로 벌어진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히는 복잡한 세상에서, 주장의 명분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나 혼자만 잘 하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데, 오히려 그것이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 내가 좀 욕을 먹더라도 우리 사회를 위해 희생하겠다는 생각이 그사람을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공익이란 게 있을까? 차라리 사익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면, 내 주장이 다른 누군가를 불편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런 자세가 대화와 타협으로 이끌어 줄 수도 있으련만.

공익이라는 명분보다는 자기 성장과 반성적 판단력이 더 중요한 시대다. "예술에 관해 더 이상 아무것도 자명하지 않다는 것이 자명하다"는 말로 아도르노는 『미학이론』을 시작했다. 예술뿐만이 아니다. 도덕과 정치, 심지어 인권에서조차도 자명한 것은 없다. 보면 원리가 통하지 않는 시대에 어떻게 개별적인 사안들을 다룰 수 있을까? 잣대가 없는데도 어떻게 길이를 잴 수가 있을까?

한나 아렌트는 그 해법을 칸트의 판단

력 개념에서 찾았다. 아렌트는 나치에 부역한 아이히만이라는 인물을 통해 '악의 평범성'을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아이히만은 독일의 국익을 위해, 공익을 위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일에 성실하게 임했다. 공익을 위한 그의 헌신이 왜 잘못되었는가? 국가를 위해 봉사한 그를 적극적으로 납치해 와 법정에서 사형시키는 게 정당인가? 아이히만의 재판 이후, 사심 없는 행동이나 '다수의 동의'만으로는 행위의 정당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게 아렌트에게 숙제로 남았다. 도덕과 정치는 다르다. 정치는 사람들이 도덕적이지 않고서도 좋은 시민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찾는 일이다. 정치적 설득은 설명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를 호소하는 과정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가 하는 소통 가능성에 달려 있다. 한 공동체를 넘어서는 문제라면 정치적 설득만으로 한계가 있다. 인간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서로 다른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공동의 관심사가 있게 마련이다. 시장에서는 살 수 없는 공공재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법률을 만들어 국가를 유지해 왔다. 예전에는 그런 국가가 공익을 대변했지만 이제는 시민들이 나서서 법적 권위를 견제하고, 행정도 이에 협력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이에 따른 갈등도 나타난다. 시민들은 여러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지만 행정은 그에 대한 책임도 지고 있어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공익추구를 명분으로 한 일방적 요구는 곤란하다.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공론장도 힘을 얻게 되지만, 중요한 건 몇몇 시민들이나

특정 단체의 요구나 주장이 아니라 이해가 다른 다수의 시민들과 공개적으로 대화하고 합의해가는 문화를 만드는 일이다.

길고 짧은 것은 대어 봐야 안다. 서로가 같은 잣대를 갖고 있지 않을 때는 더 그렇다. 내 것이 더 길다고 혼자서 떠드는 건 소용없다. 공익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이다. 입시에 치우쳐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그러나 집회나 시위를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공익을 위한 공공기관이지만 학교 안에도 온갖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그 얽히고설킬 실타래는 학부모와 학생, 교사와 관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며 조금씩 풀어갈 수밖에 없다. 서로의 생각을 맞춰가는 일이 주장을 쏟아내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그렇게 맞대어보면서 서로의 생각을 알아가는 것이 길고 짧은을 주장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다.

가까이 있는 교사나 학부모들과 대화하면서 학교를 바꾸지는 않고 교육청더러 왜 못하냐고 탓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문제해결을 위한 절차는 정해져 있고 행정은 그 절차대로 따르는 것이 공정한 일이다. 그 절차가 내용까지 담을 수는 없다. 자신의 생각이 정말 옳은지, 왜 우리 교육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지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풀어가야 한다. 『대화란 무엇인가』에서 데이비드 북은 그런 대화야말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공생을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비록 갈 길이 멀어 오래 걸리더라도 말이

社說

'기능 한국' 이끌 기능인의 잔치 응원한다

오늘 광주·전남 기능경기대회

'기능 한국'을 이끌어갈 광주·전남 지역 '기능인의 잔치'인 기능경기대회가 1일부터 5일까지 광주·전남지역 19개 경기장에서 치러진다. 전문기능인을 양성하고 그들을 우대하는 것은 인재가 유일한 자원인 우리나라에서 필수적인 투자다. 능력중심의 사회를 만든다는 의미도 크다. 대회에 출전하는 지역 선수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쳐 그동안 닦아온 기술을 당당히 발휘하길 응원한다.

3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1일부터 5일까지 광주공고와 순천공고 등 광주·전남지역 19개 학교에서 '2024년 기능경기대회'가 열린다. 오는 8월 경북에서 열리는 '전국 기능경기대회' 대표 선발전을 겸한 이번 대회는 금형, 용접, 헤어·의상디자인, 산업용 로봇, 모바일 로봇틱스, 게임 개발, 사이버 보안 등 50개 직종에서 경쟁이 펼쳐진다. 참가 선수도 광주 339명, 전남 388명 등 727명에 이른다. 프랑스 리옹에서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광주 선수 9명도

포함됐다.

과잉학력과 스펙 경쟁이 일산인 우리 사회에서 기능인재들의 도전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숨은 저력이었다.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통해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 일상 생활에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역할로 사회의 기반 시설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도 그들은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다. 교육부터 취업까지 국가적인 비효율과 낭비를 막고, 경제 성장과 고용시장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기능인의 활약은 꼭 필요하다.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이지만 그 제조업의 근본은 기능인의 기술력에 있다. 이번엔 참가하는 지역 선수들이 정당당하게 자신의 실력을 발휘해 대한민국 제조업의 기둥이 되길 기대한다. 기능인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관심도 한층 높아져야 한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727명의 지역 기능인 모두가 좋은 성과를 거둬 기능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꿀잼도시' 광주, 특색있는 매력 찾아내야

재정비 광주관광공사 역할 커

광주관광공사가 직위공모제와 관리직 축소(13명→9명) 등 조직개편을 통해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역사이팅 광주' 실현을 위한 발빠른 변화에 나섰다. 광주관광공사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 구조혁신을 통해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광주관광재단이 통합해 출범한 공기업이다.

광주관광공사의 비전은 광주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관광마이스 통합 플랫폼'이다. 단순한 두 기관의 물리적 결합을 넘어 동반상승 창출과 경영혁신을 통해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꿀잼도시, 온종일 활력이 넘치는 도시광주'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즐길거리와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도시인 광주는 '예향'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광주는 관광객 방문 추이를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련 광주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늘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상다리가 부러진다'는남도 먹거리야 손색이 없고, 국립공원 무등산, 국

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비엔날레 등 문화 콘텐츠도 다양하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굵직한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광주의 위상도 날리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관광객들은 광주를 외면하고 있다. 왜일까. 외지인들이 찾아올 만한 도시 매력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문화도시 광주를 표방하면서도 문화생활을 잘 즐기고 있다는 시민은 일부에 그쳤고, 맛 부심을 내세웠던 음식도 점차 특색을 잃어간다. 오죽했으면 지난 대선 당시 '광주에만 없는 것들'은 전국적으로도 큰 이슈였다. 그중 손꼽힌 게 복합쇼핑몰이었다. 광주시는 현재 유통업체와 협약을 맺고 입점 절차를 밟고 있다. '노잼도시'라는 꼬리표까지 달았다.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한 광주관광공사의 역할이 그 만큼 중요하다. 민선 8기 광주시는 3000만 도시이용 인구 달성을 위한 관광 전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광주관광공사가 풍부한 광주 스토리를 기반으로 혁신안을 내놓을 때 광주는 얼마든지 '꿀잼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

PC와 모바일에서 만나 보세요

www.jnilbo.com
m.jnilbo.com
facebook.com/jnilbo

구독문의 (062) 510-0471
광고문의 (062) 512-0100

서석대



내로라하는 희극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객 혹은 시청자들을 웃기기 위해 만들어진 코미디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이들도, 싫어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자극적인 주제와 작위적인 상황 연출 등이 주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탓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편이지만, 오히려 이런 코미디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시기도 있다. 바로 선거철이다.

미국 NBC에서 40년간 방영하고 있는 'Saturday Night Live'의 포맷 라이선스를 받아 제작된 'SNL 코리아'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콩트와 정치 풍자를 통해 고정 출연자인 블랙 코미디(Black Comedy) '크루'들과 각 회차마다 중심이 되

는 유명인인 '호스트'들이 망가지면서 웃음을 자아낸다. 특히 각 정당의 색깔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텔레토비를 국회의사당에 사는 정치인에 빚대 표현한 '여의도 텔레토비'라는 코너는 18대 대통령 선거 이슈와 맞물려 인기를 끌며 SNL을 대표적인 정치 풍자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게 했다. 이후 10여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프로그램은 흥망성쇠를 겪고 폐지 수순을 밟기도 했지만, OTT 서비스를 통해 다시 부활하며 다가오는 4·10 총선과 관련해서도 정치적 풍자를 이어가고 있다.

실 새 없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대통령을 흉내 내는 캐릭터부터, 여야 대표 정치인들의 모습으로 분장해 말투를 따라 하며 논란의 행보와 발언을 꼬집는 캐릭터들까지. 배우들의 연기력과 표현력에 웃음을 터뜨리다가도 이 모든

것이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한숨을 내쉬기도 한다.

실제 정치인들이 출연하는 인터뷰 코너에서는 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직설적이고 직군은 질문에 당사자들이 재치있게 답변하는 모습도 그려진다. 윤석열 대통령도 2022년 후보자 시절 당시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유로운 정치 풍자를 '프로그램의 권리'라고 표현했을 정도다.

물론 이러한 정치 풍자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도한 희화화라는 지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웃지 못할 현실에서 통쾌한 웃음을 선사하는 풍자를 예찬한다. 웃음에서 느껴지는 굼직한 뼈대는 분명 통쾌함과 문제의식을 등

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끔은 직설적인 말보다 은유적인 표현과 웃음이 더 큰 힘을 갖듯, 사태를 줄줄이 늘어놓기보다 부조리를 응축해 날리는 묵직한 한 방이 효과적이다.

풍자는 주목도에서도 매우 뛰어나다. 정치에 관심 자체가 없는 세대에게는 뉴스나 신문이 제공하지 못한 흥미와 궁금증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 나아가 함께 웃는 것에서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는 조용한 연대로 이어져 곧 사회의 불합리함을 도려내는 무기로 발전하기도 한다.

'Black'과 'Comedy'. 명암의 양극단에 있는 단어들이 발휘하는 힘이 우리 사회를 보다 더 낮게 만들기를 바란

곽지혜 취재1부 기자

全南日報	사창·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36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94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